

“과학적 검증없는 시찰, 면피성 이벤트”

민주, 후쿠시마 시찰단 두고

“적당히 넘어가면 국민 저항”

한일, 오늘 서울서 국장급 협의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달 23일 파견될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두고 “과학적 검증 없는 (오염수) 투기는 안 된다”며 제대로 된 조사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일 당국이 오는 12일 국장급 실무 협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번 현장 시찰이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만큼 단순 시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피스 등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이 문제 해결 없는 투기는 해양 안전에 치명적”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

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한 시찰단은 전혀 무의미한, 면피성 이벤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합의한 것인가”라며 “유류인가, 안전성 검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시찰단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곳, 봐야 할 자료를 검증해야 한다”며 “시찰단 방문으로 적당히 넘어가면 국민 저항은 볼 보듯 환하다”고 꼬집었다.

당 대일공약외교대책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도 시찰단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시찰’은 두루 둘러본다는 뜻인데,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이 시찰만으로 검증되는 문제인가”라며 “정부가 시찰단을 명분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시찰단 활동에 합의한 것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전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성렬 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정부의 대일 외교를 총체적인 ‘굴욕 외교’라고 평가한 뒤 기사 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마음이 아프다’고 한 것을 두고 “진정성 없는 입발림이자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짚어냈다.

장철민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 나와 “최근의 한일 정상회담은 미국과 일본을 위한 정상회담이었지,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나”라며 “외교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한일 양국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이행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국장급 회의를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은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 국장, 일본 측은 외무성 카이후 아츠시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수석대표로 양측 관계부처가 참석한다.

/서울=김대원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25일 본회의의 전세사기법 처리”

가상자산 공개법도 논의키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러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된 이후 오는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여야는 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됐었으니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힘, 열흘만 최고위...김기현 “국민께 송구”

“당 지도부 언행 신중 기해야”

태영호 후임 선출 신속 진행

국민의힘이 11일 열흘 만에 최고위원회의를 재개하고, 일부 최고위원들이 잇따른 ‘설화’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전날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면서 설화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최고위를 재가동한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

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한다. 당 지도부의 일원은 언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도덕 불감증이라고 하여 우리 당도 그럴 수는 없다”며 각종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조치가 미온적임을 예들려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며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전날 윤리위 징계 결정과 관련, “유능한 집권당의 모습으로 힘

있게 일해야 할 때 국민 눈높이에 걸려된 말과 행동으로 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도부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는 지난 1일 이후 열흘 만에 열렸다.

국민의힘은 통상 매주 두 차례 최고위를 개최하지만, 윤리위 징계 심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일과 8일에는 최고위를 열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태 의원이 전날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함에 따라 내주 최고위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관위를 구성하는 등 후임 선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민주, ‘김남국 코인’ 진상조사단 가동

외부 전문가 참여 수습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수습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하고 경제 전문가인 이용우·홍성국 의원, 변호사 출신 김한규 의원이 참여한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의문이 제기된 것을 조사할 것”이라며 “코인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회의에서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및 계좌와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부터 ‘팩트체크’를 하기로 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회의 후 조사 범위와 관련, “전반적인 것을 살펴볼 것이지만, 이해 충돌 여부까지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이론이 있다”며 “(김남국 의원에게)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당 지도부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겠다고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본격 가동됐다.

지난 5일 처음 논란이 불거진 이후 거의 매일 추가 의혹이 터지고 있는 데다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인 만큼 자칫 내년 총선 악재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서둘러 진화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투기성 짙은 자산에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국민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고 보고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 코인 진상조사단 첫 회의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조사단 팀장이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스팀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